

‘지역일꾼론’ VS ‘정권심판론’ 대충돌

여야 지도부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 민주-민노 당력 집중 광주 남구 지원 유세

7·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당력을 총동원해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역일꾼론’을 바탕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득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방선거에 이어 ‘제2의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전날 정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갖고 하반기 국정안정을 위해 재보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충북 충주로 내려가 윤진식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하지만, 최대의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에는 이재오 후보가 ‘나 홀로 선거운동’을 고집함에 따라 당 지도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그는 전날 선출된 안상수 대표 등으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날 살리려면 한강을 건너지 말아달라. 내가 한강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정중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오는 28일까지 자전거로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은평을 골목길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때를 썩한 선거운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유세차도 타지 않고, 수행 인원을 1~2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박

지원 원내대표 외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까지 총동원돼 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대책본부 출정식 및 4대 강 공사 지지 결의대회를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박3(정세균·손학규·정동영)’는 이어 나란히 인천 계양을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뒤 각각 충북 충주와 강원 태백, 철원 등지로 흩어져 지원유세를 계속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재계 압박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 지원을 위해 집거 중인 강원도 춘천에서 내려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새벽 5시 춘천에서 상경해 오전 7시 은평을에서 장 상 후보와 함께 출정식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원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춘천생활 정리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주변에 “내 선거처럼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최근 인사는 전했다.

민주당과 비(非) 민주당 연대 구도로 치러지는 광주 남구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대거 지원에 나선다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장병완 후보 개소식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원혜영 전 원내대표·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강기정·조영택·김재균·이용섭·유선호 의원, 장영달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16일과 17일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세균 대표가 잇따라 남구를 방문해 장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광주를 방문해 오병운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16일에는 새로 출범하는 민노당 5기 지도부가 대거 광주를 찾아 광주 남구 필승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가 제 15회 여성주간 기념식이 열린 15일 광주 남구 문예회관 앞에서 선거운동에 앞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동철 “남구 양보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

민주당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은 7·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야권 단 일화를 위해 광주 남구 후보를 다른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15일 “눈앞의 승리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지극히 정치공학적,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민주당 남구 공천은 지역발전과 변화라는 미래지향적 선택을 하는 것이 광주시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



정과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야당에 양보 운운하는 것은 당 후보의 등에 비수를 찌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상수 “野와 개헌 논의할 것”

“분권형 대통령제 소신”을 화합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또 국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도 이제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당이 너무 지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는 15일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또 당내 화합과 관련, “박 전 대표를 곧 한 번 찾아볼 생각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며칠 내 찾아볼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당

계파간 입장차로 준비위원 인선 지연 민주 전대 준비위 “개점휴업”

비주류·중도와 “재보선 핑계는 태업” 주류측 “당 분란으로 힘 낭비 말아야”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일주일 이상 낮잠만 자고 있다.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비주류 측과 중도파의 요구로 지난 7일 꾸러졌지만 계파 간 입장차 등으로 준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대 준비기구가 개점 휴업 상태를 맞자 비주류 측과 중도파는 “당 지도부가 재·보선을 핑계로 태업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의 김영진 상임집행위원장은 15일 “당이 준비위를 구성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당장 당내 제 정파와 협의해서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류 측은 논의를 질질 끌면서 재·보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준비기구 활동에 들어간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는 “재·보선을 앞두고 당 분란으로 힘을 낭비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득권 보호 차원이라는 비주류 측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 집단지도체제, 대의원투표제 등에 있어 현 민주당 방식이 한나라당 방식보다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태여서 조기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현재 정세균 대표 체제에 유리한 현 당권·당규를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주류 측 한 의원은 “전당대회

가 당권·당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논쟁의 대결장이 돼서 승리하는 측에서 공약대로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현 당권·당규를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대다수 중도파가 주류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날 총선 공천을 2년여 남기고도 공정한 공천을 위해 ‘공천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나경원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등 민주당보다 당내 개혁에 속도를 내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의 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준비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7·28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치를 것인지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총리론’ 다시 등장... 견제용?

안상수 대표 제기에 친박계 발끈

‘박근혜 총리론’이 또다시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무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총리를 원하고 거기 여러 후보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총리를 함으로써 국정 경험을 쌓고 그것이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친박 측은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신뢰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 그다음에 총리건 무엇이건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며,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 총리론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으나 답은 항상 같았다. “이 대통령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거부했던 것.

그럼 왜 주류 측은 뻔한 답을 알면서도 거듭 총리 제안을 하는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박 전 대표 견제론’으로 해석한다. 총리에 전혀 뜻이 없는 박 전 대표에게 국정 운영을 도와 달라는 의미의 총리 제안을 계속함으로써 ‘무책임한 박 전 대표’란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표가 총리직을 수용한다고 해도 주류 측의 손해는 없다. 현 국정 시스템에서 박 전 대표가 총리를 한다고 국정 운영이 하루아침에 원활하게 흘러갈 리 없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국, 박 전 대표가 총리가 되면 그동안 수 없이 총리 자리에 머물고 만 수많은 대선후보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주류 측은 보고 있다. 주류 측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박근혜 대선 후보’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표도 이 같은 노림수를 알기에 총리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지방선거에 지원유세를 하지 않는 이유도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 지원을 해서 일부라도 책임지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표가 이 정부에서 총리를 수용하는 날은 이명박 대통령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날이고 나아가 친이계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받는 날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날이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